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목 차>

1.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해제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 성 자	이름	*붙임 참조
	총괄 담당부서 (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직급	*붙임 참조
	국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규석		연락처	*붙임 참조
	총괄과장	손필훈		이메일	*붙임 참조

※ 붙임 : 규제사무별 작성자

1.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신설/표준형>

이름	나상명, 유예지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893, 8896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해제 <강화/표준형>

이름	윤병민, 김병석
직급	4급, 7급
연락처	044-202-8936, 8939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간이형>

이름	류상훈, 임세종
직급	5급, 전문위원
연락처	044-202-8938, 8942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2.규제조문	제 194조의2, [별표 21의2]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조항 신설('21.08.17)에 따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그 기준 등을 준수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법령에 따라 적합한 기준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 휴게시설 설치 시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제재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적정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의 비용편익분석에 모두 계상하여, 시행규칙의 규제비용은 미계상		
	11.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해 당 없 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 당 없 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u>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u> (제194조의2 관련)</p> <p>1. <u>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u> 가. <u>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u> 나. <u>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u></p> <p>2. <u>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u> 가. <u>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u></p>

현행	개정안
	<p><u>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것</u></p> <p><u>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도록 기능을 갖춘 것</u></p> <p><u>라. 환기가 가능할 것</u></p> <p><u>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u></p> <p><u>3. 비품 및 설비</u></p> <p><u>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u></p> <p><u>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춘 것</u></p> <p><u>4. 휴게시설 관리</u></p> <p><u>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u></p> <p><u>나.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u></p> <p><u>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u></p> <p><u>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u></p> <p><u>비고 (일부 적용제외)</u></p> <p><u>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u></p> <p><u>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u></p>

현 행	개 정 안
	<p><u>한 경우: 제2호</u></p> <p><u>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u></p> <p><u>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u></p> <p><u>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u></p> <p><u>우: 제2호나목</u></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22.8.18. 시행)
 -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를 통하여 설치·관리 기준 준수를 지도
 -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 '서울대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 따라서 실질적인 휴게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여 사업주가 준수토록 하고,
 -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부개입은 반드시 필요
 - (주요 내용) 해외사례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를 참고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규정
 - 작업장 특성 등으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1>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 확보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및 유해 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냉난방 설비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환기 및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 구비
- **(휴게시설 관리)** 관리 담당자 지정, 청결 유지, 표지판 설치 등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적용 예외

- **(크기 및 위치 예외)**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예외)**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습도 예외)**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
규제대안1	<p>사업주가 설치한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할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p> <p>* (크기)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p> <p>* (위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단, 위험장소와격리)</p> <p>* (일부 적용제외) 옥외작업 또는 공간 협소(300㎡ 미만) 등은 일부 기준 적용제외</p>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고,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재대상이 되는 설치·관리 기준 구체화 ○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 기준으로서의 기능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증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노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면적 기준 상향(6→9㎡), 1인당 면적 기준 도입(1 ~ 2㎡) ○ 위치는 휴게시설은 100m 이내, 층별 설치 ○ 노사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한 설치·관리 ○ 성별로 분리 설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휴게실 별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단체(노동계 2회, 경영계 3회) 의견수렴(22년), 연구용역과 병행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1년)
경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면적기준 도입 반대, 면적기준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관리되도록 폭넓게 완화 ○ 위치는 걸어서 이동하지 않고 별도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 ○ 물리적인 공간 부족 사업장 등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례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를 참고하고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 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규제대안1) 해외사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규제 수급자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작업장 특성 등으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일부 설치·관리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여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

3. 규제목표

-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공간 보장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를 통하여 설치·관리 기준 준수를 지도
 - 그러나 설치·관리 기준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설치·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없어 실효성 확보 필요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재 대상에 포함(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시행: '22.8.18.)
- 해외사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규제 수급자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 또한 작업장 특성 등으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일부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50억 미만 공사현장)은 단계적 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병행
 -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를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목적과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한 규제의 수단이 최소한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 인정
- 또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휴게시설 설치를 통한 편익이 비용보다 많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차등화적용

○ 영향평가

- 기술규제 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상시 근로자 20인(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등화 적용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구분	관련근거	주요 내용
독일	작업장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도) 21도, (조도) 200럭스, (소음) 55dB(A)을 초과해서는 안됨 •(면적) 휴게실과 휴게공간은 최소한 1인당 1m²의 지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 지면 6m² 확보, 건설현장 휴게실 최소 층고 2.30m •(위치) 안전한 장소(뜨거운 표면 근처 제외), 이동식 칸막이벽, 가구 또는 식물들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시각에서 분리 •(시설장비) 등받이 의자, 테이블, 뚜껑이 달린 휴지통, 청소 용이한 비품, 구내식당이 없거나 의사진단에 의해 별도 식단 유지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식료품 가열 및 냉각을 위한 시설 필요 •(거리) 이동시간은 도보 및 회사 내 이동수단을 통해 5분 이내로 하여야하며 이동거리는 100m 이내 •(층고) 휴게실 또는 휴식구역의 층고는 최소한 2.3m •(환기)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프랑스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 작업장, 휴대품 보관소 및 위생 시설의 최소 조명 값은 120lux •(면적) 탈의실은 개별 불연 캐비닛과 충분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치수를 지정, INRS(안전보건연구원)는 1인당 1m²의 표면적을 계획할 것을 권장 •(시설장비) 50인 미만 : 휴식공간은 마련, 냉장고, 가열장치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 음식·음료수의 냉장·보관 장치, 음식을 가열할 수 있는 기기, 10명을 위한 생수기(냉온수), 충분한 의자와 테이블, 근로자가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좌석에는 등받이 장착 •(환기) 육체 노동이 없는 사무실, 구내 : 25m³/시간, 케이터링 룸, 판매 룸·회의실 30m³/시간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용한 휴게실을 마련 •(면적) 휴게실은 휴식하는 근로자 수에 응당한 넓이어야 하며, 청결해야함

		•(시설장비)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누워서 쉴 수 있거나 또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 등의 설비 구비
--	--	--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 면적의 합계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11년부터 이미 의무를 부과했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18.7월)'을 통해 지속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해 옴
-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서 수규자의 법령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 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맞춰 건설현장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사용항목 확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확대

○ 규제 차등화 방안

- 상시 근로자 20인(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등화 적용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 점검·감독 등 산재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은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점검·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
이므로 별도의 재정적 요인은 고려할 필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18년)를 통해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지도해 옴.
-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청소·경비업체 등의 청소·경비·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추진
- 해외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21년), 휴게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21~'22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22년)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규모 및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
- 사업장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점검·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임

3. 종합결론

-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18년)를 통해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등 적정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사업장에 지도해왔으나,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 어려움
- 해외사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규제 수급자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 또한 작업장 특성 등으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일부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공사현장)은 단계적 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등
- 규제 수규자의 순응도, 사업주의 재정부담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시행규칙 개정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해제		
	2.규제조문	[별표 11]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input type="checkbox"/>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취지</p> <p>○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건설업체를 자체심사·확인업체로 선정*</p> <p>* ('18) 37개 → ('19) 39개 → ('20) 32개 → ('21) 39개</p>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최근 자체심사·확인업체에서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위를 유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p> <p><000산업개발 대형 붕괴사고 사례></p> <p>[1] '21.6.9. 광주 학동 해체공사 사망사고</p> <p>▶ '21.6.9.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부지 해체공사에서 해당 건축물 3층 높이의 토사 위에서 굴착기가 작업을 하던 중, 토사 및 건축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되어 이동 중인 버스를 덮쳐서 시민 9명 사망 및 8명 부상</p> <p>[2] '22.1.11.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p> <p>▶ '21.1.11. 광주 서구 화정동 HDC 시공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39층 바닥 콘크리트(슬래브) 타설 중 벽체·바닥 붕괴로 근로자 6명 사망, 3명 부상</p> <p>○ 특히, '21.6.9.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시민 9명이 사망한 대형 재난으로서 사고발생 당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자체심사·확인업체 선정 취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p> <p>* 해당 사고에 대하여 서울시는 000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4개월 처분('22.4.13.)</p> <p>☞ 근로자 2명 이상 사망 외에도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체심사·확인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전문기관을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p>		
	7.규제내용	<p>▪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체심</p>		

		사·확인업체에서 즉시 제외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시공평가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자체심사확인업체로 선정된 20~30개 내외 건설업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 <tr> <td>피규제자</td><td>건설업체</td><td>시공평가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자체심사확인업체로 선정된 20~30개 내외 건설업체</td></tr>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업체	시공평가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자체심사확인업체로 선정된 20~30개 내외 건설업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업체	시공평가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자체심사확인업체로 선정된 20~30개 내외 건설업체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자체심사·확인업체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해당 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하도록 자체심사확인업체 취소 ▪ (기대효과) 해당 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정성 여부를 공단이 철저히 심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현장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행을 확인, 안전한 건설현장 및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의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없음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비용 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자체심사·확인업체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심사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체심사·확인업체가 취소되어도 추가 발생비용 없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은 자체심사·확인업체의 경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나, 자체심사·확인업체가 취소되는 경우 공단이 확인을 실시하게 되므로 추가 발생비용 없음 <input type="checkbox"/> 편익 검토 ○ 민간보다 전문성 있는 공단의 심사·확인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이 전보다 더욱 개선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도 기대								
	11.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 일몰설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p> <p>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p> <p>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업체 중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이며,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 있고, 제4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로서 해당 연도 8</p>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p> <p>1.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설업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하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기간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p> <p>나.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중 산정하</p>

현 행	개 정 안
<p><u>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없어야 한다.</u></p> <p>2. (생략)</p>	<p><u>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시공능력 순위 200위 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회사</u></p> <p><u>다.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회사</u></p> <p><u>라.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건설회사</u></p> <p><u>마. 별표1 제4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회사</u></p> <p>2. (현행과 같음)</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취지

○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건설업체를 자체심사·확인업체로 선정*

* ('18) 37개 → ('19) 39개 → ('20) 32개 → ('21) 39개

□ 그러나 최근 자체심사·확인업체에서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위를 유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000산업개발 대형 붕괴사고 사례>

[1] '21.6.9. 광주 학동 해체공사 사망사고

▶ '21.6.9.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부지 해체공사에서 해당 건축물 3층 높이의 토사 위에서 굴착기가 작업을 하던 중, 토사 및 건축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되어 이동 중인 버스를 덮쳐서 시민 9명 사망 및 8명 부상

[2] '22.1.11.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 '21.1.11. 광주 서구 화정동 HDC 시공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39층 바닥 콘크리트(슬래브) 타설 중 벽체·바닥 붕괴로 근로자 6명 사망, 3명 부상

○ 특히, '21.6.9.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시민 9명이 사망한 대형 재난으로서 사고 발생 당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자체심사·확인업체 선정 취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 해당 사고에 대하여 서울시는 000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4개월 처분('22.4.13.)

☞ 근로자 2명 이상 사망 외에도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체심사·확인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전문기관(공단)을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기준 현행 유지
	내용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가 있을 경우 차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
규제대안1	대안명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 기준 추가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사·확인업체 유지하는 경우 제도 취지 훼손 ■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계속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게 되어 건설현장 위험요인 제거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만 자체심사·확인하는 제도 취지 보장 →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기대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21년도 자체심사·확인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안전부서장 간담회('22.3.25)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사회적 물의 업체의 자체심사·확인업체 즉시취소 필요성에 동의 	제도개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당초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유도 가능한 대안

3. 규제목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고위험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안전성을 심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방지계획서 현장 작동성 강화 및 사망사고 감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사회적 물의로 인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자체심사·확인업체는 공단을 통해 심사·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기여
- (수단) 자체심사·확인업체가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자체심사·확인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공단을 통해 심사·확인
- (목적-수단 비례적 타당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확인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업체와 동일하게 공단에서 심사·확인하도록 변경
→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조치 개선이 가능한 동시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설업계의 부담은 최소화된 합리적 규제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 기준 추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 기준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심사·확인 주체만 변경하는 것으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공단에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심사 시 자체심사결과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있어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 미발생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 취소기준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안 마련('22.1~3월) → 업계 의견 수렴('22.3.25.)

2. 향후 평가계획

사회적 물의로 자체심사·확인업체 제외 시 효과성 평가('24년~)

3. 종합결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사회적 물의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위를 유지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므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규제 목표 달성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 기준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 기준 추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별표26]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4.25 ~ 2022.06.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기관이 그 결과를 3회 이상 전산시스템에 미입력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부과 중(시행규칙 별표26)이나, 법정 지도횟수* 초과 영업을 위해 고의로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지도결과 역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사례 발생</p> <p>*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함(시행령 별표18)</p> <p>이에 전산시스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신설(1·2차 : 영업정지(3~6개월), 3차 : 지정취소)할 필요</p>		
	7.규제내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국 203개소)		
	9.규제목표	지도기관이 고의로 계약사실을 은폐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재해 감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 일 몰 설 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u>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u>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u>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u>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마.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가.~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법 제74조제4항 관련)	(생 략)	(생 략)	(생 략)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법 제74조제4항 관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1)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1)~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12) 영 별표 18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입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사.~서.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사.~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지도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해 지도기관은 계약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발급하고,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어
- 법정 지도횟수 초과 영업을 위해 고의로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지도결과 역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수립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전산시스템을 통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신설(1·2차 : 영업정지(3~6개월), 3차 : 지정취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22.3.4, 서울, 지도기관 간담회	전산미입력 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해당없음

3. 규제목표

- 지도기관이 고의로 계약사실을 은폐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품질 향상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지도기관의 계약누락 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해당 의무 위반기관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가장 높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대상 아님

- 중기영향평가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누락방지를 위한 구체적 처분 신설건으로 중기영향평가와는 관계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누락방지를 위한 구체적 처분 신설건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와는 관계없음

- 일몰설정 여부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일몰 설정대상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 타법사례

- 해당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고의로 계약사실을 은폐하는 지도기관에 대한 구체적 처분 신설 건으로 피규제자는 현행 규정을 적합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충분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도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충분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 재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건에 해당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지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에 대해 논의한바 있으며 입법 예고 시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고용노동부는 지도기관에 대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해당 규제의 이행여부에 대해 계속 확인할 예정

3. 종합결론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지도기관의 기술지도가 산재예방을 위한 주요한 정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지도 품질 보장을 위한 기관의 지도횟수를 초과하기 위해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신설하여 중소건설현장의 기술 지도 품질을 제고할 필요